

# 광주·전남 초중고 일제고사 '몰살'

13·14일 학업성취도 평가 앞두고 0교시·문제풀이 수업 등 과행 난무

## "서열화 경쟁 과열" "사교육비 절감" 찬반 의견 엇갈려

광주 북구의 모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요즘 화가 잔뜩 나 있다. A군은 추석 직후 치러진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일제고사를 대비한 '0교시 수업'에 파김치가 됐기 때문이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시험(일제고사)을 한번 만 보는 B초교로 전학을 보내달라고 폐를 써 달래느라 흔이 났다. 얼마나 시험에 힘들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는 13일과 14일 치러질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초등학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6학년을 대상

으로 0교시 수업을 하고 오후 5시까지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도 내년 일제고사를 대비해 6학년과 똑같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초등학교에서는 올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특별수업을 하는 등 일제고사에 대비해 왔다.

전남의 한 중학교는 성적이 나쁘거나 학습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학을 권유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회와 소풍 등을 일제고사 이후로 연기하는 등 학교 행정마다 일제고사 위

주로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각종 과행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에 대한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제고사에 따른 과행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지만 일제고사의 원래 취지를 살

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은 "경쟁이 강조된 교육 현실에서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하고 경쟁을 더 과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현재의 일제고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도 "아이들에게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문제풀이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말 그대로 성취 수준을 진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이다"며 "상적 공개에 따른 서열화 같은 부작용을 막고 일제고사를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평균 6학년 학부모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걸 싫어할 부모가 있겠느냐"며 "아이가 공부에 시달리는 게 안타깝지만 학교에서 책임지고 공부를 가르쳐주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는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초 4~6년 과정), 중3(중1~3년 과정), 고1 학생(고 1년 과정)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영역을 평가한다. /박진표기자 lucky@

## 인권침해·차별

### 영상작품 공모

#### 인권위 광주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호남지역 인권 현안을 소재로 한 영상작품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장르와 형식은 제한이 없으며, 일상속 인권침해 및 차별 등을 소재로 한 내용을 상영시간 5분 이상의 영상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다음달 23일까지로, 당선 발표는 12월 10일이다. 문의 062-366-1895.

앞서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지난 7월 인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의식을 높이고 영상 초보자들에게도 출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흘간 '인권영상교실'을 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



## 영장심사 피해자도 참석한다

### 광주지검 '참여권 보장 방안' 시행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영장실질심사) 과정에 피해자도 참석하세요."

광주지검은 9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의견을 전술할 수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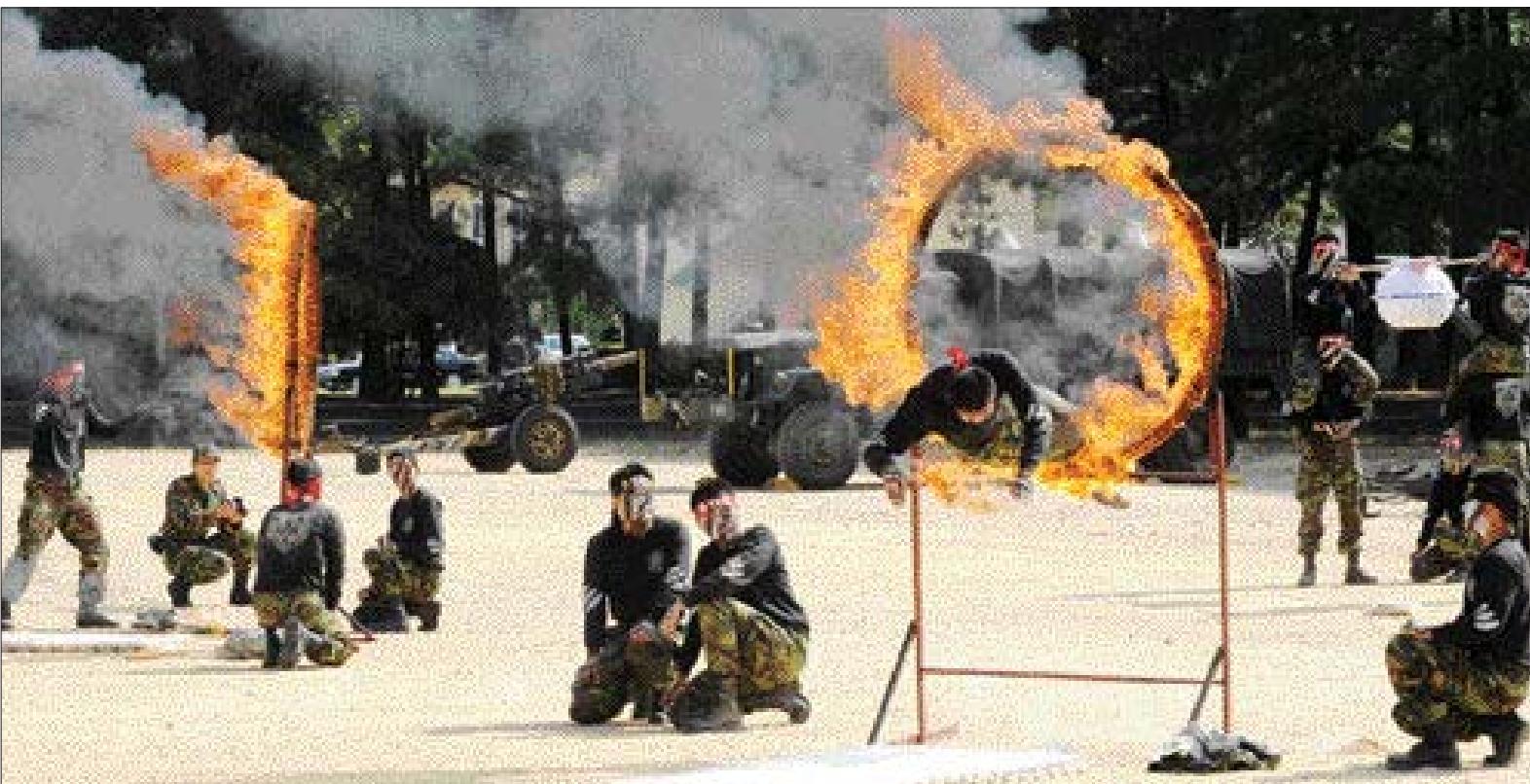
이 제도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피해자 등 이해 관계인을 상대로 방청 및 의견 전술에 대한 의사 확인한 뒤 방청 및 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피해자의 형사 사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방청할 수 있고, 판사가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규정을 몰라 영장실질심사 참석 신청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광주지검은 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길태기 광주지검장은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가 참석하면 가해자의 신병결정에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통령 표창 기념 특공무술 시범

창설 아래 16차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9일 육군 제31 보병사단에서 열린 '건군 61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 기념행사'에서 사단 기동대 장병들이 특공무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년 연속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은 31사단은 1954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고향서 어선 전복 70대 노부부 숨져

지난 8일 오후 8시20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인근 해상에서 1t급 목선이 전복돼 선장 배모(78)씨와 부인 박모(78)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마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여수해양경찰은 사고 해역에 경비정을 급파해 전복된 선박 주변에서 물에 빠진 배씨 부부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 실업 고교생 해외 인턴십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오는 2010년부터 지역내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호주 등 선진국에 파견하는 '해외인턴십 맞춤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9월 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오는 2010년부터 3년 간 각각 4억5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해 전문계 고등학생 90명(2010년 20명, 2011년 30명, 2012년 40명)을 선발해 인턴십을 실시하고 선진국 현지 기업에 취업 시킬 예정이다.

### 광주시-광주교육청 내년부터 90명 선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직업교육이 본질인 전문계 고등학생을 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해외취업을 통해 다양한 취업 진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시는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기능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호주를 우선 대상 국가로 정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해외 인턴십 참가 학생을 매년 2월 공모해 선발하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사전에 갖추도록 생활영어와 기술전문영어, 기술분야에 대해 방과 후 영어수업과 지역 산업체 연수 등을 활용하는 사전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 광주경찰 올 임의동행 5,153건

### 작년보다 2.5% 늘어…공권력 남용 인권 침해 소지

#### 전남지역은 6,429건

광주·전남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이 올 들어서만 1만건을 훌쩍 넘어서는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는 지속적인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도 올해 임의동행 건수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임의동행 처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최인기(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들어 8월까지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임의동행한 건수

는 1만1천582건에 이른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해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경찰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광주경찰은 올해 임의동행 건수가 5천153건으로, 한 달 평균 644명이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628.6건)에 비해 2.5%(15.4건) 늘어난 것이다.

최인기 의원은 "임의동행이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좀처럼 즐거워지는 것은 수사관의 억지 어느 때나 개인을 구속한 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임의동행 처리내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 평균 803명 가량이 경찰서에 임의동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의동행에 대한 처리내역 기록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경찰은 임의동행 건수만 기록하고 있을 뿐, 해당 피의자나 참고인이 대한 수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기 의원은 "임의동행이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좀처럼 즐거워지는 것은 수사관의 억지 어느 때나 개인을 구속한 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임의동행 처리내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수해복구 공사 돈받은

### 전남도청 사무관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9일 수해복구 공사입찰 과정에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전남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흥군 수해복구 공사입찰 과정에서 2순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7일 긴급체포해 금품수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정기자 ejkim@

## 아파트 할인분양 항의

### 부상 입주민 고소장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사측 일용직원에게 입주자가 폭력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불루밍 아파트 입주자 김모(여·36)씨는 "전날 오후 아파트 분양사 측이 고용한 일용직원 3~4명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회사 측이 고용한 일용직원들에 의해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허리를 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광주시 북구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 등 입주자들은 지난 8일 "입주자 200여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시공사에서 고용한 용역직원 4명이 얼굴 등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입주자들은 시공사가 미입주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시세가 입주 후 2년 내에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을 때 최대 5천만원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분양하자는 이에 항의, 지난달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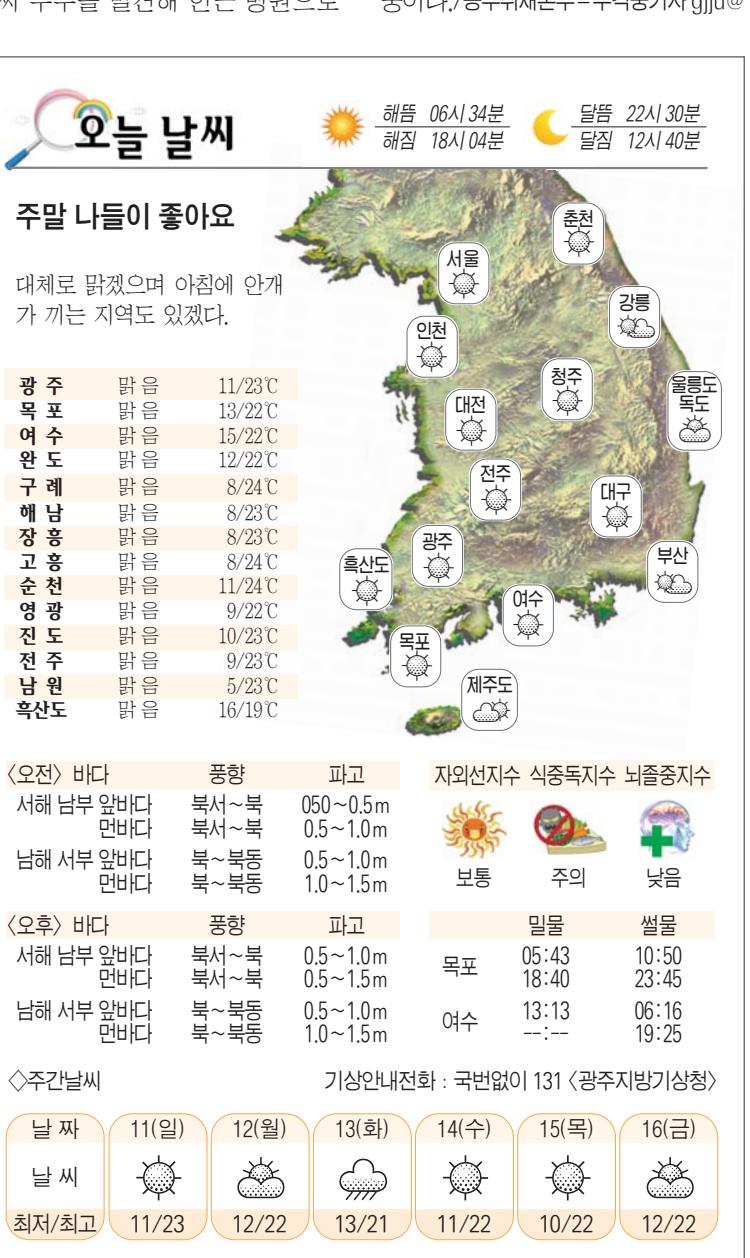
## 민족 50대 무등산서 쿨쿨 큰일날 뻔

○…한밤 중 술에 취해 산속에서 잠이 든 50대 남성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한도의 한숨.

○…9일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20분께 "훈자 산행에 나섰다가 술을 한잔했는데 깊은 잠이 들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도와달라"는 A(52)씨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를 급파.

○…A씨는 인근 민가와 1.5km 가량 떨어진 광주시 북구 화암동 무등산 졸기 도로변에서 발견됐는데, A씨는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 보니 산속이었다"며 구조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 농촌 7인조 썩쓸이벌 검거

### 영암·나주 등 둘며 농작물·농기계 훔쳐

전남 농촌지역을 둘며 농산물과 농기계 등을 닥치는 대로 훔쳐 농민들을

을 울려온 상습 절도범 일당 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강북경찰은 9일 전남 농촌지역을 둘며 농산물과 농기계 등을 훔친 유모(35)씨를 특기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8)씨 등 2명에 걸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농산물, 농기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과종기나 추수철에는 낮에 농가를 빙다 점을 노려 빙집을 찾았더니며 농촌 철재 시설물과 농기계 등을 마구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본 농민이 더 없는지 조사하는 한편, 훔친 농기계와 시설물을 사들인 장물범을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